

도정질문 답변요지

◆ 배진석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경주)

질문의원	배진석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관련부서	복지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질문제목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질문요지	○ 경북 백신 접종률이 전국 하위 수준인 이유 ○ 고령층 백신 접종률 향상을 위한 정책		
□ 경북 백신 접종률이 전국 하위 수준인 이유			
○ '21. 6. 7. 0시 기준 1차 접종률은 전국 62.4%, 경북58.9%, 전국대비 3.5% 낮으며, 인구대비 1차 접종률은 전국 14.8%, 경북 17%, 전국대비 2.2% 높음			
○ 10월 전국(장애인)체전 개최에 따른 예방접종센터 장소 선정 협의 난항으로 예방접종센터 개소 지연(구미시 등 13개 시·군)			
• 센터개소 : (4.1) 1개소, (4.8) 5개소, (4.15) 6개소, (4.22) 5개소, (4.28) 7개소			
○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와 백신효과성에 대한 불신			
• TV, 라디오, 인터넷 등 부작용 다수 보도,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불명확			
○ 정부의 4~5월 화이자 백신공급 물량 부족			
• 4월 대상자(259,000명) 대비 41% 물량 공급(105,300명)			
• 5월 4주차부터 75세 이상 고령층 미 접종자 백신 추가 공급 및 접종, 80% 이상 접종 완료 예정			
□ 고령층 백신 접종률 향상을 위한 정책			
○ 도지사 주재 고령층 예약률 제고 시군 긴급 대책회의 개최(5.27.)			
• 시군 본청, 보건소, 읍·면·동 구체적 역할부여, 추진상황 매일 체크			
• 지역 오피니언 리더, 이·통장 협의회, 종교시설 등 각종 단체 통한 예약 독려			
• 예방접종 효과와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집중 홍보			
⇒ (5.27)경북 54.7%, 전국 60.1% → (6.3) 경북 80.2%, 전국 80.6%로 전국평균과 비슷			
○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홍보 및 지원 추진 중			
• (전국 공통)			
- 백신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 가족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6.1~)			
- 예방접종 완료자 요양병원·시설 주기적 선제검사 제외, 접촉면회 가능(6.1~)			
- 사적모임 등 인원제한 기준에서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등(7.1~)			
• (우리 도)			
- 휴양림, 박물관 등 주요 공공시설 이용료와 입장료 할인 또는 면제 (7월~)			
- 노인복지시설 대상 찾아가는 문화공연 추진(7월~)			
- 주요 관광지·관광시설 입장료 할인 등(7월~)			

질문의원	배진석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관련부서	자치행정국 (교육정책과)
질문제목	경북 지역 대학 지원 관련		
질문요지	○ 지역 청년층 유출과 대학의 수도권 이전 논의에 대한 대책 ○ 지역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은		
□ 지역대학의 수도권 이전 가능성은 ○ 대학의 설립, 통·폐합, 이전 등은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며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으로의 대학 이전에 관하여는 수도권정비 계획법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어려움 □ 지역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은 ○ 우리 도에서는 도와 대학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연구중심 혁신도정 (네트워크 경북)을 추진 중. ○ 대학, 기업 등 민간의 창의적 연구 역량을 행정에 융합.. 공동운영 체제로 전환 • 도, 출연기관 ⇔ 대학 파트너십 구축 → 공동연구, 아이디어 개발 등 ○ 대구·경북 21개 대학 총장님들과 간담회 진행(5. 31) • 경상북도 ⇔ 대학 간 협업 협약서 체결.. 상생협력협의회 구성·운영,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 포함 ○ 경상북도 차원에서 인재 양성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계획 • 경상북도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 연구 용역(계획) ○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을 위해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을 교육부에 건의하였음			

질문의원	배진석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관련부서	과학산업국 (소재부품산업과)
질문제목	경북의 특허출원 현황 관련		
질문요지	○ 지역 R&D, 지식재산 관리 현황 ○ 지역 R&D, 지식재산 관리 강화를 위한 도 차원의 대책		
□ 지역 R&D 지식재산 관리 현황 ○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경북 지역의 특허 출원 건수는 2016년 이후 조금씩 감소세를 보임, 2020년 전국 7위로 나타남 ○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 출원 건수가 크게 증가 • 관련 특허를 보유하는 대기업 및 정부출연연구소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서울, 경기 지역의 특허 출원 건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임 ○ 단, 특허출원 이후 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현황을 보면 전국 4위로 나타남.(최종 특허권을 획득하는 등록률이 중요) ○ 지역 R&D 관리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술 선점 추진 •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 철강 산업 고부가가치화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新전자산업 육성 • 미래차 관련 부품생산 원천기술 확보 방안 마련 □ 지역 R&D 지식재산 관리 강화를 위한 도 차원의 대책 ○ 지역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 활용촉진을 위해 포항, 구미, 안동 3곳의 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추진 •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식재산기반 창업촉진 사업(48억 7천만원) • 글로벌IP스타기업(17억), 중소기업IP바로지원(5.5억), IP협력기반강화(0.9억), IP디딤돌(3.4억), IP나래(21.8억)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사업(12억원) • 경북형 4차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핵심기술을 발굴·육성 지원 ○ “연구중심 혁신도장” 실현을 위해 지역 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시민사회와 플랫폼 연계 강화 ○ 신산업분야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을 바탕으로 신성장동력 확보 노력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혁신 관련 효율적인 R&D 정책 추진으로 지역의 산업경쟁력 발전 유도			

질문의원	배진석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관련부서	과학산업국 (과학기술정책과)
질문제목	국가지원, 공모사업 등 기반조성 사업관련		
질문요지	○ 국가연구개발지원 사업 중 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 ○ 지역적합성, 사업효과, 예산부담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우선 선정에만 급급. 이에 대한 대책과 사후관리 방안은?		
□ 국가지원 기반구축사업 추진현황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상용화 기술 및 시제품 제작 지원을 위한 장비 구축, 실증지원을 위한 센터 조성 등 기반구축사업이 수반 됨 ○ 전수조사 결과,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총 45개(완료 11, 진행 34)의 사업 추진 - 완료사업의 경우 대부분 지속적인 관련기술 개발, 시험분석 및 기술 자문, 기업 입주를 통한 산업생태계 확충에 기여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기업육성 실적 저조 등 당초 목표대비 성과가 다소 부진 - 진행 중인 사업은 과제의 기획·관리·평가가 정부 표준시스템에 의해 체계적으로 추진(PM제도, 장비도입심의위원회 개최, 단계평가 통한 패널티 부여 등) □ 지역적합성, 사업효과 등에 대한 검토 방안 ○ 선정전 연구용역을 통해 산업분석, 기업 수요조사 등 사업 필요성 파악 ○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역적합성, 파급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해 유사중복사업을 검증함. ○ 그러나, 이러한 분석이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고 도의회, 지자체, 주관기관의 책임의식이 삼위일체가 이루어져야 사업목적 달성 가능 ○ 특히 산업기반구축사업은 5~10년 이상의 미래를 보고 꼭 추진해야하는 사업 * '10년 예타 통해 설립된 첨단메디컬섬유센터에서 KF, BFE 등 마스크 인증 표준을 만듦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대책 ○ 지역기업, 대학, 연구소 연계협력 강화로 경쟁력 있는 사업 선정 ○ 부처(전담기관) 평가체계와 별개로 자체점검을 강화하여 사후관리 철저			

질문의원	배진석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관련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질문제목	연구용역 관리 관련		
질문요지	○ 지난 10년간(2011~2021) 경상북도 연구 용역 현황 ○ 경상북도의 연구 용역 및 성과 관리		

□ 지난 10년간 경상북도 연구 용역 현황 관련

○ 일반현황

연도	건수	금액	연도	건수	금액
'11년	55건	45억	'16년	57건	36억
'12년	58건	52억	'17년	72건	37억
'13년	62건	50억	'18년	74건	56억
'14년	61건	52억	'19년	106건	61억
'15년	57건	33억	'20년	129건	96억

□ 경상북도의 연구 용역 및 성과 관리

○ 최근 연구용역이 많은 사유

- 도정현안 사업 추진과 중앙예산 확보를 위한 전문성과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많아 연구용역비 수요 증가
- 도정 주요시책 및 미래신성장 동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발굴을 위한 예산 필요
- 중앙부처의 정책변화 및 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용역 수요 증가

○ 점검 및 결과 활용이 되고 있는지 여부

-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13명) 대면심사 확대로 용역 시스템 강화 노력
- 학술용역시스템(PRISM) 점검, 결과활용 점검(6월중 예정) 등 용역추진의 내실화에 노력 추구

○ 향후계획

- (사전검토 강화) 용역의 필요성 및 중복성 등을 면밀히 검토
- (위원회 활성화) 대면회의를 통한 용역에 대한 환류 시스템 구축
- (성과 및 점검) 상시점검 및 내부지침 강화로 예산 편성시 페널티제 적극 추진